

표지

면지

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15:10	개회식 － 개회사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축 사 :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15:20	주제발표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신동화 교수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식품안전 주요 정책방향 강봉한 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16:20	종합토론 － 좌 장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토론자 :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연구소장) 박지용 (한국식품과학회장)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사장)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7:00	폐 회

목 차



* 개 회 사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1

* 축 사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3

* 주제발표

1.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5

신동화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2. 식품안전 주요 정책방향 57

강봉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 좌 장** - 이철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 토 론 자 -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연구소장)	79
- 박지용 (한국식품과학회장)	85
- 이군호 (식품음료신문 사장)	91
-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97
-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01

개 회 사

이 철 호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쁘신 중에도 이곳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셔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는 식약처 관계자 여러분을 많이 모시기 위해 이곳 오송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세미나를 이곳에서 개최하도록 흔쾌히 허락해주신 정승 처장님께 감사드리며, 준비와 진행을 도와주신 장병원 차장님,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식약처 직원 여러분께서는 식약처의 발전을 위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식량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식량이 모자라면 안전을 따질 여유가 없지만,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어도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식약처가 있습니다. 식약처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식약처에 근무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존에 가장 필요한 식품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식품 관련 산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화학 간장 파동이 났을 때 수입간장이 대거 상륙했고, 김치 기생충알 파동으로 우리의 김치 수출이 절단 났었습니다. 라면의 벤조피렌사건으로 한국 식품의 대외 신인도가 한때 크게 흔들렸습니다. 검찰, 경찰, 국회의원 등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판단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식품안전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과학의 진실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있어 안심입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금년도 연구과제로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채택하고 전북대 명예교수이시고 현재 식품안전협회 회장이신 신동화 교수님께 이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식품안전협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연구하신 내용을 오늘 발표 하십니다. 열과 성을 다해 연구하신 연구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발표를 하시는 신동화 교수님과 강봉한 국장님께 감사 드리며, 지정 토론자로 나오신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연구소장님, 한국식품과학회 박지용 회장님, 식품음료신문 이군호 사장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님, 그리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활발히 토론에 참여하여 새로 시작하는 식약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정 승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존경하는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철호 이사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학계, 산업계, 단체 등 식품전문가 여러분!

오늘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에서 주최하는 “제11회 식량안보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2010. 4. 27. 창립하여 “GMO의 과학적 진실과 이용 등 10회의 식량안보 토론회”와 “식량자급실천국민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철호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출범 당시 창립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하였는데 제11회 토론회를 우리처에서 개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방안”입니다.

최근 국민의 건강·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안전이 국정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수준은 한 나라의 국력과 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 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신속하고 과학화된 업무처리와 선진화된 식품 안전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적인 전문성과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위한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선진화된 먹을거리 안전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과는 마음을 열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여 식품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귀중한 대안에 대하여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량 안보와 식품안전정책 발전에 기여해온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앞으로도 더욱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단체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식품전문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한국식품안전협회 회장,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신 동 화





Profile

신 동 화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경 력

(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

신동화식품연구소 소장

(사)한국장류연구회 회장

식품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농림수산식품부)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청)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회장

(사)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응용생물공학부 식품공학전공 교수(현 명예교수)

식품안전관리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제안

2013. 12. 09.

신 동 화
[사]한국식품안전협회



말씀드릴 내용

- I. 식품안전 관리 개괄
 - II. 국내·외 식품산업 현황
 - III. 식중독 발생 사례와 사고 증가 이유
 - IV. 식품안전 사고 대응 사례
 - V. 산업계의 이견 사례
 - VI. 대 소비자 안전관리 개념 정립 필요
 - VII. 정부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 VIII. 대 식약처 건의 사항
 - IX. 식약처 중장기 정책 방향 제안
 - X.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 결 론

I. 식품안전관리 개괄



세계 식중독 사고 들 (2013. 2-11.)

1. 미국 CDC : 대장균 O157:H7(Salad)
2. 캐나다 식품검사청: 대장균 O157:H7(버거제품)
3. 미국 CDC: *Salmonella* Heidelberg(닭고기,)
4. 미국 CDC: *Salmonella* Typhimurium(분쇄육)
5. WHO: 새로운 바이러스 발표(NCoV)
6. 알래스카: *Campylobacter*(비살균 우유)
7. 일본 나라시: *Salmonella*(중국음식)
8. 방글라데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살처분
9. 유럽 각국: 말고기 불법 혼합(Phenylbutazone 오염)
10. 미국: *L. monocytogenes* (Apple slice)

국내 식중독 사고 들(2013. 11.)

1. 김치세상	E:coli 0157:H7	[11.15]
2. 대추골드	이물[유리]	[11.14]
3. 단호박가루	유통기한 미 표시	[11.08]
4. 스파이스 파우더 티머릭	납기준 초과	[11.05]
5. 마산	홍국색소	[11.04]
6. 파닭소스	제조일자 변조	[11.01]
7. 수입김치(중국산)	E:coli 0157:H7	[10.31]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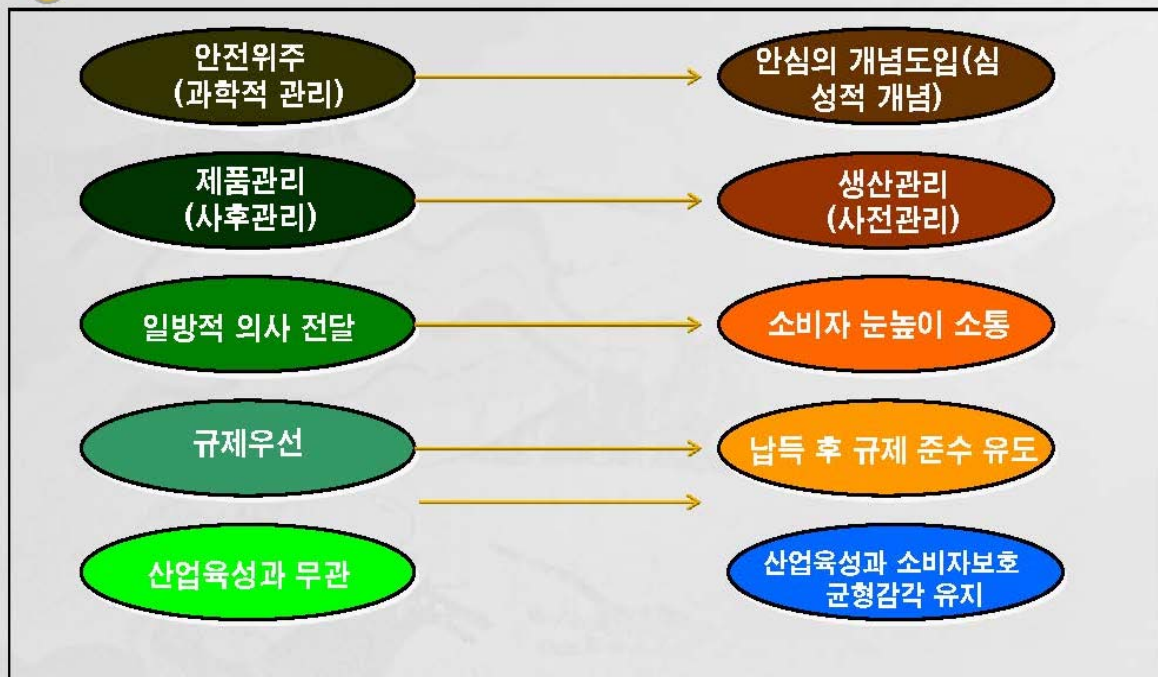
연 대	구 분	의 식	인 식
60년대 이전	요기(療飢)	굶주림의 해결	양적 충족 우선
70년대	인식(認識)	좋은 것, 나쁜 것 구분	식품재료인식
80년대	선택(選擇)	좋은 것 선택	안전성 인식
80년대 후반	선호(選好)	자기기준의 식품선택	안전성 최우선
2000년대	식도락(食道樂)	즐기는 음식선택	건강 최우선

☆ '80년대 이후 소비자의 안전의식 고조

☆ 2000년대는 안전성 단계를 지나 건강
지향적 인식확대



식품안전관리 개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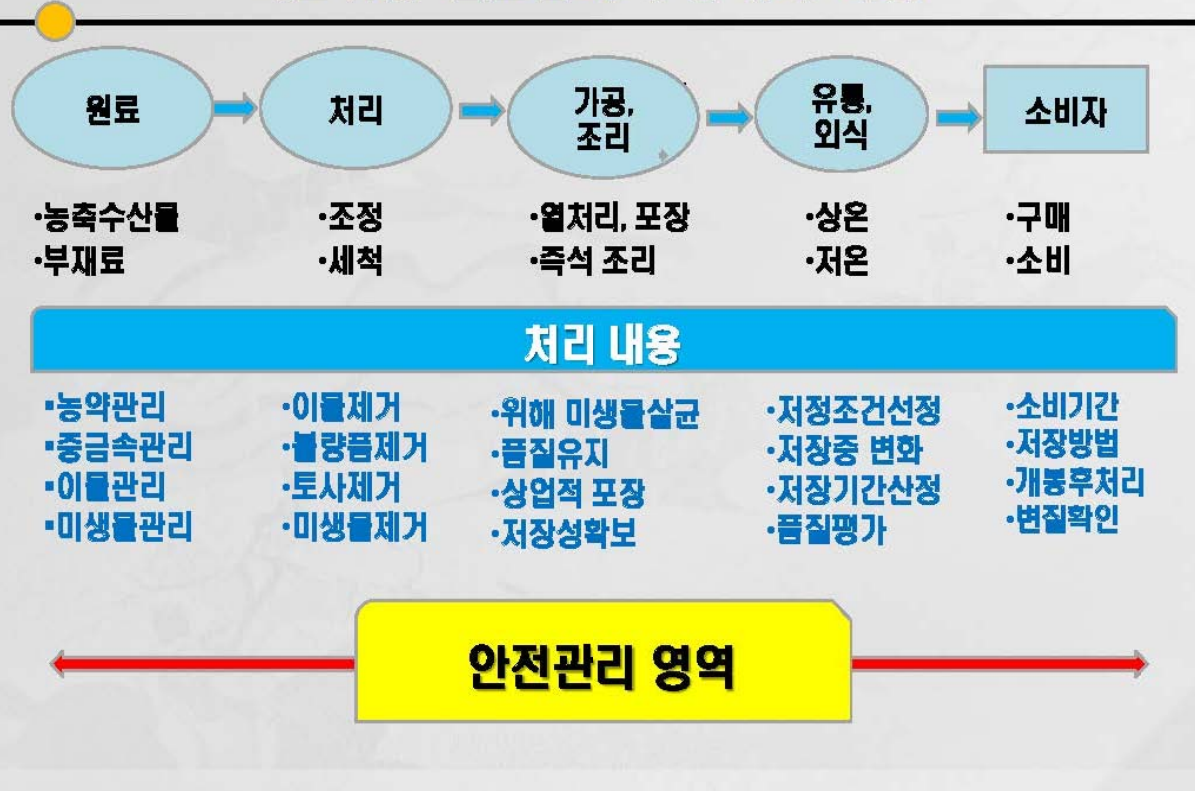


7

안전관리의 대상의 변천 과정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영역과 기능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관심사

근래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1. 내가 먹는 식품은 안전한가?
2.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이 식품에 좋은 성분이 들어 있는가?
4. 가격은?



소비자는 식품의 절대 안전을 추구

- 이 지구상에 절대 안전한 식품은 없다.
단 그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노력이 계속 될 뿐이다.
- 그 이유
 1. 모든 식품의 원료는 흙에서 재배, 무수한 미생물, 및 오염물질
 2. 공기 등 주위 환경도 많은 오염원.
 3. 식품 처리 가공 수 백만 명의 사람이 관여
 4. 다양한 저장 유통과정 중 오염 및 변질 발생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안 의식과 그 원인

- ▶ 총론적 막연한 불안감 확산, 언론의 순기능 필요
- ▶ 과학보다 감성이 앞서는 경향
- ▶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과 불만 – 냉소주의
- ▶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 부족
- ▶ 소비자 눈높이 정보 부족 및 제공 방법 부적절
- ▶ 실질적인 교육 기회 결여(형식적인 의무교육에 치중)



가공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1)

▶ 가공식품은 모두 나쁘다? 왜?

- 첨가물, 불균형 영양, 위해 성분, 정크 후드 등

▶ 가공하지 않는 경우 잃을 수 있는 것은?

→ 먹는 즐거움 상실 : 다양한 종류의 식품생산 불가능

→ 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 계절성, 지역성 극복 불가능

→ 산업위축 : 식품산업 발전저해, 일자리 창출 제한

→ 부가가치의 저위 : 가치 향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

→ 안전성 확보 어려움 : 가열처리, 살균처리 미흡으로 안전성확보 어려움

→ 소비 창출 위축 : 건강과 안전성만 부각, 제품소비 위축



가공식품에 대한 오해와 진실(2)

▶ 모든 식품에 대한 절대 안전성 요구

▶ 안전에 대한 개념의 혼돈

▶ 과학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 내재

▶ 각개 약진형 의견 표출

▶ 협의로 합리적 결론 유도에 미숙

▶ 경제적 여유에 따른 건강 및 수명연장 욕구 분출

▶ 자녀에 대한 과도한 보호 본능



II. 국내 · 외 식품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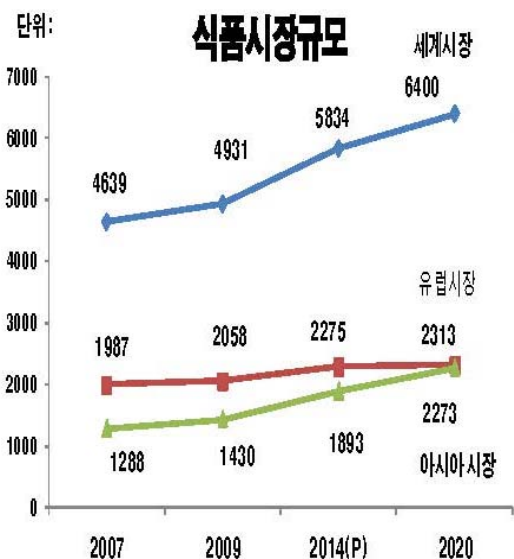


국내 · 외 식품산업 규모

세계 식품시장 규모

‘09년 약4.9조 달러, ‘20년 6.4조 예상

- IT(3.5), 자동차(0.5)보다 큰 시장
-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이 빠르게 성장(51%)
- 전세계 식품교역 규모는 ‘11년 2.3조 달러



국제 식품 시장 규모 및 예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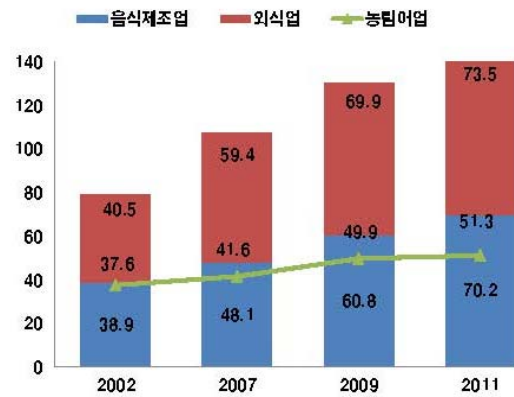
국내 식품산업 규모

국내 식품시장 규모

'11년 제조업 70조원, 외식업 74조원

- 최근 5년 연평균 제조업 83%, 외식업 82% 성장
- 제조업 매출액 9.7%, 국가전체 일자리 7.7%
- 수출은 12년 80억달러, 무역수지 254억달러 적자

국내식품산업 성장추이('02~'11년)



국내 식품 시장 규모 및 성장 추이

식품 · 외식 산업의 현실



산업의 영세성, 양극화로 영업자의 안전 책임의식 미흡

종업원 10명 미만 전체의 78%, 매출액 20억 미만 업체 전체의 90%

외식산업의 발달에 따른 위생관리 부응 미흡(30만~40만 영업)

안전 관리능력 미흡에 따른 지도, 관리 및 교육이 절대 필요

대외적 환경변화

WTO
SPS
TBT

→ SPS 협정문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식품 중 식품첨가물, 오염물질(잔류농약, 잔류수인약품, 중금속, 기타 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독소와 관련된 모든 기준·규격
- 과학적 근거, 국제적 조화, 투명성, 일관성, 동등성 원칙

→ TBT 협정문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기준(Standard) 및 강제 규정(Technical Regulation)에 의한 제품의 기준·규격, 제조공정, 표시, 적부판정 등 관세가 아닌 조치 또는 제도로써 무역규제에 대하여 정함.

CODEX

-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국가간 원활한 교역 도모
- CODEX 기준·규격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WTO에서 권고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강제 기준·규격 성격임.

FTA

- 한·미, 한·싱가포르, 한·칠레, 한·EFTA, 한·ASEAN FTA 협정
- 한·캐나다, 한·EU, 한·멕시코, 한·일본, 한·인도, 한·QCC 추진 중
- 한·중국, 한·페루, 한·러시아,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터키 예정

Ⅲ. 식중독 발생 사례와 사고 증가 이유



◆ EU 및 서유럽 국가별 식중독 발생상황(2010)

구분	건수	환자수(명)	입원 환자수	사망자 수	10만명당 환자수(명)
Austria	193	839	155	2	2.3
Belgium	105	1,194	60	0	1.0
Denmark	76	2,228	11	0	1.4
Finland	43	923	7	0	0.8
France	1,039	9608	710	1	1.6
Germany	439	2,378	239	3	0.5
Greece	3	193	48	0	<0.1
Italy	225	1,205	-	0	0.4
Netherlands	251	1,214	75	3	1.5
Spain	482	4,025	506	7	1.1
Sweden	293	2,370	32	0	3.2
U.K.	67	1,451	86	5	0.1
EU 합계	5,262	43,473	4,695	25	1.1
Norway	53	789	8	0	1.1
Switzerland	11	106	43	0	0.1

• 자료 : EFSA, Foodborne Outbreak, 2010

EU 회원국의 식중독 원인균의 분포율 (단위: 건,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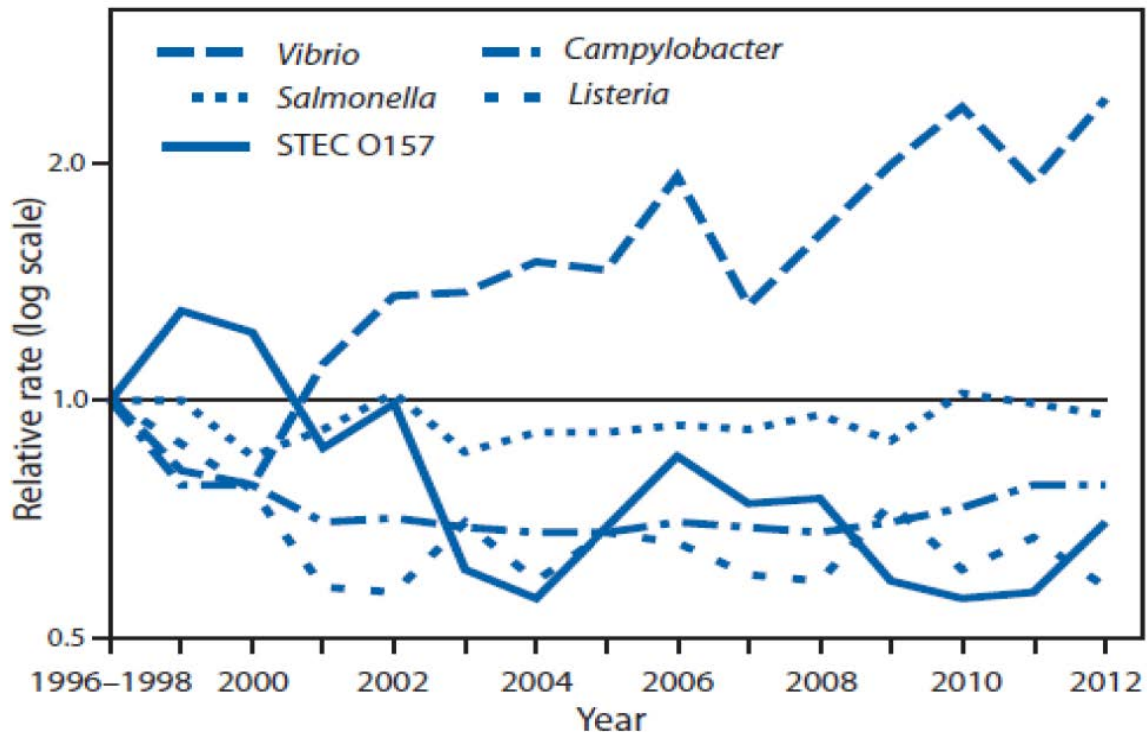
원인균	2010				2009				2008			
	발생 건수	%	환자 수		발생 건수	%	환자 수		발생 건수	%	환자 수	
			strong	weak			규명	예측			규명	예측
Salmonella	1604	30.5	341	1263	1722	31.0	324	1398	1888	35.4	490	1398
Viruses	790	15.0	67	703	1943	18.8	70	973	697	13.1	38	659
Campylobacter	470	8.9	27	443	333	6.0	16	317	488	9.2	21	467
bacterial toxins	461	8.8	87	374	558	10.1	218	340	525	9.8	159	366
Other causative	229	4.4	6.1	168	214	3.9	55	159	167	3.1	68	99
Other bacterial	64	1.2	19	45	52	0.9	18	34	20	0.4	11	9
E. coli	31	0.6	2	29	75	1.4	18	57	75	1.4	10	65
Parasites	30	0.6	15	15	51	0.9	40	11	70	1.3	38	32
Yersinia	-	-	-	-	-	-	-	-	22	0.4	2	20
Unknown	1583	30.1	59	1524	1502	27.1	21.8	1284	1380	25.9	53	1327
EU Total	5262	100	698	4564	5550	100	977	4573	5332	100	890	4442

• 자료 : EFSA, Foodborne Outbreak, 2010

미국의 연도별 식중독 식중독 발생상황

연도	건수	연평균 발생건수	연 평균 환자 수 (5년 평균)	건당 환자 수
1993-1997	2,751	550.2	17,311	6.3
1988-2002	6,647	1,329.4	25,047	3.8
2003-2007	1,151	230.2	24,400	21.2
2008	1,034	1,034.0	23,152	22.4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미국의 연도 별 균종별 식중독 발생 현황 (CDC, 2013.)

일본의 연도별 식중독 식중독 발생상황

연도	건수	환자 수	건당 환자 수(명)
2001	1,928	25,826	13.4
2003	1,585	29,355	18.5
2005	1,545	27,019	17.5
2007	1,289	33,477	26.0
2009	1,048	20,249	19.3
2010	1,254	25,972	20.7
2011	1,062	21,616	20.4

• 자료 : 김정선 외 보건사회연구원, 2012)

유럽과 미국의 최근 식중독 사례(2011. 6.)

대장균 식중독, 유럽 16개국에서 발생

- 원인균: *E. Coli* O104: H:4
- 감염자수: 3,934명
- 사망 52명
- 원인: 새싹 추정(원인 확실히 밝히지 못함)

미국 20개 주에서 켄터루프(멜론) 식중독

- 원인균: *L. monocytogenes*
- 감염자수: 100여명
- 사망자수: 29명(1924년 이후 최악의 사건)
- 원인: 멜론(재배지 토양, 물, 과일 표면)

국내 식중독 발생 현황

행정구역	식중독원인	식중독 발생 시설	2009		2010		2011	
			건	명	건	명	건	명
총계	총계	총계	228	5,999	274	7,218	249	7,105
		식품접객업체	95	1,132	133	1,704	117	1,753
		집단급식소	59	3,435	53	4,189	40	2,521
		가정집	11	89	3	11	8	51
		기타	60	1,343	82	1,314	84	2,780
	살모넬라	총계	17	477	27	677	24	1,065
	황색포도상구균	총계	12	864	19	372	10	323
	장염비브리오균	총계	12	106	18	223	9	133
	바실러스세레우스	총계	-	-	14	401	6	98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총계	5	527	5	171	7	324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총계	-	-	0	0	-	-
	캠필로박터제주니	총계	7	405	15	380	13	329
	노로바이러스	총계	32	568	31	1,994	31	1,524
	불명	총계	100	1,255	105	1,030	108	1,132
	기타	총계	43	1,797	37	1,970	41	2,177

자료: 식약처, 2013.10.

식품기인성 질환에 따른 경제적 비용

국가 별	금액	근거
미국(억불)	777	H. Botteller(2012) Food Safety News
	1,520	R. Scharff(2012)
한국(억원)	11,692	강능성(신호성 등, 2009)
	10,743	남해성(신호성 2009, 등)
	15,817-15,877	박경진(2001)

※ 미국의 식품기인성 질환(1999) ⇒ [2012]

- 건수/년: 7,600백만 ⇒ 4,800만 건
- 사망: 5,000명 ⇒ 3,000명
- 입원: 255,000명 ⇒ 128,000명

식품 관련사고 발생을 증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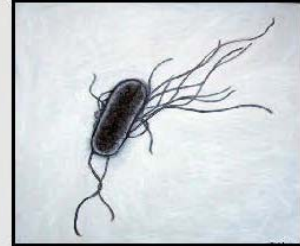
▶ 식생활과 환경의 변화

- 외식 및 집단 급식의 증가
- 다양한 조합, 가공 식품의 출현
- 실내 온도의 상승



▶ 새로운 식중독 미생물의 출현

- 병원성 대장균
- 저온 증식 식중독 미생물 출현



▶ 식품 취급자의 위생관리 개념 미흡

- 외식사업 확대에 따른 종사원의 대응 미흡 (기초지식, 교육)
- 부적절한 환경 및 시설

▶ 소비자 및 업체의 신고율 상승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1)

▶ 원료 분야

- 신식품종 육종 보급
- GMO
- 시비(비료) 문제



▶ 신종 위해 미생물의 출현

- *E. coli* O157:H7
- *Enterobacter sakazakii*
- *Hafnia alvei*, 그 다음?
- 개인 간 반응 격차 발생



▶ 가공 공정 중 생성 물질

- 다양한 새로운 가공방법 출현
초고온 살균, 고압살균, 전자기살균, γ -ray 살균
- 가공 중 변화
Acrylamide, 유지 산화물, amine류, 트랜스 지방 그리고 앞으로는?
- 원료의 조합에 의한 변화
- 상호반응에 의한 신종 물질 생성(nitrosoamine)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2)

▶ 포장재에 의한 위해

- 다양한 신종 포장재 출현
- 포장재 자체 및 식품과 접촉 반응
- 처리 조건에 따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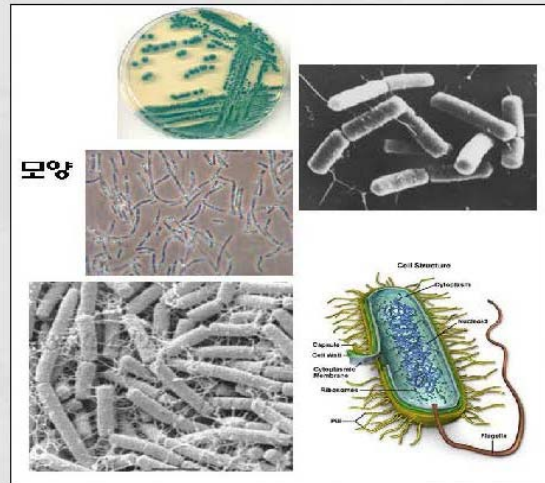
▶ Allergens

- 계속 새로운 물질 발견
- 개인간 격차 및 민감도 차이
- 확률론으로 관리 불가

▶ 유통 방법의 다양성

- 냉장, 냉동, 상온유통
- 고온 유통
- 온장 상태에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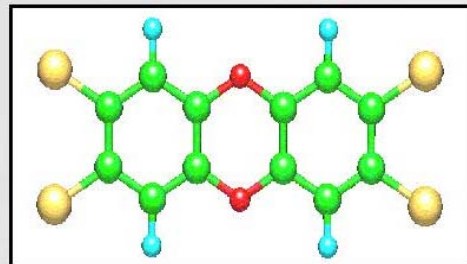
Bacillus cereus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3)

▶ 환경의 영향

- Dioxin
- 공해물질의 원료 혼입
- 광산 지역의 토양 오염 물질



▶ 항생제 내성

- 다양한 항생제 내성 위해 미생물 출현
- 축산 및 수산물 중 항생제 관리
- 인수공용 항생제 남용, 내성 문제



▶ 만성 질환 예방 분야

- 비만 관리를 위한 영양 관리
- 암, 심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의 저감화 수단

안전관리 영역의 확대(4)

▶ 수질 관리 분야

- 다양한 오염원의 경로
- 토양, 환경 등과의 연계성
- Virus 등 전파 매체



▶ 식품 취급자의 위생 관리

- 관여 인원 약 3-4백만명
- 식품 안전 관리와 최종 책임자



▶ 기능성 식품의 관리

- 기능성 성분의 안전관리
- 유효 섭취 수준의 제시
- 과량 섭취 시 부작용

IV. 식품안전 사고 대응 사례



식품 안전사고 대응 미흡 사례(1)



쓰레기 만두사건

→ 사회적 물의, 업체도산, 국가신용도 추락



MSG 불매운동

→ 매출액 급감, 제조회사정리, 발효기술 퇴보



GMO

→ 모든 식품에 표시 의무화, 20 ~ 40%가격 상승
(미주-콩90%, 옥수수 80%)



방사선 조사식품

→ 과학의 불신, 신선식품의 위험성 내재



광우병 사건

→ 국론분열, 국력낭비, 소비자 불안, 모두 피해자



<영화 : 올드보이>

식품 안전사고 대응 미흡 사례(2)



김치 기생충 사건

→ 국가 신인도 추락, 수출량 급감



중국산 멜라민 사건

→ 정량적 안전성 확인 필요사례



석면 탈크 사건

→ 흡수기작의 과학화 필요



식품 이물 사건

→ 감성이 주도하는 과민 반응(생산비 상승)



식품 안전사고 대응 미흡 사례(3)

▶ 대일본 김치 수출 사례

기생충 알 사건으로 대 일본 수출량 변화

* 일본 김치시장 : 7억불(갯김치 5억, 발효김치 2억)



식품 안전사고 대응 미흡 사례(4)

▶ 벤조피렌 사건

- 식품소재에서 검출 된 것을 완제품으로 추정
- 완제품에서 불검출
- 수출 상대국에서 불검출 발표

▶ 벤조피렌 사건에 의한 피해

- 당해 업소의 막대한 피해
- 국가 신인도 추락
- 한국 가공식품 수출액 급감



식품 안전사고 우수 대응 사례(1)

▶ 맛가루 이슈 처리

-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여 홍보로 사건화 방지
- 비 식품 전문 집단에 의한 사건 확산, 차단
- 업체의 막대한 손실 예방
- 식품원료의 사용 한계 정확히 제시

▶ 블랙 컨슈머에 대한 단호한 조치

- 과학적 원인 규명으로 업체 보호
- 블랙 컨슈머 양산에 확실한 쐐기
- 업체의 부당한 피해 사전 예방

식품 안전사고 우수 대응 사례(2)

▶ 국산 수출용 굴의 노로바이러스 사건

- 오염원 확인 차단으로 수출 재개 가능
- 오염원 차단을 위한 전방위 노력
- 양식업체에 상당한 기여
- 청정 해역으로서 위상 유지

▶ 수입식품 중 위해물질 사전 모니터링

- 제외국 부적합 항목에 대한 통관 시 사전검사
(곰팡이독소, 보존료, 이산화황 등)
- 주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강화 관리 실시

식품안전 사고와 우수사례에서 얻는 교훈

- ▶ 사고 원인은 과학적 사실에 기초하여 밝혀져야 한다.
- ▶ 사고의 내용을 숨김 없이 정확,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 비 비전문인에 의한 한 건 주의는 국가와 소비자 그리고 관련 기업에 큰 피해를 준다.
- ▶ 모든 관련자들의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V. 산업계와의 이견 사례



업계와의 이견 사례(1)

신호등 표시제

- 지나친 단순화로 소비자 혼란
- 영양표시제 강화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HACCP의 일괄 적용

- 위해성이 높은 대상 선별 적용 바람직

이물처리

- 국가기관의 관여보다 업계자율처리 지향(PL 법)
- 관련 기관 활용(소비자단체, 협회 등)
- 심각한 위해 사항에 한정 국가 기관 관여



2009년~2011년 식품 이물 보고 현황 (식약청 보도 자료, 2013. 2.)

○ 이물 보고(신고) 현황

연도	총계	영업자 보고	소비자 신고
2008	1,949	1,093 (56.1%)	856 (43.9%)
2010	8,597	6,258 (73.0%)	2,339 (27.0 %)
2011	5,624	4,118 (73.2%)	1,06 (26.8%)
2012	4,733	3,274 (69.2%)	1,459 (30.8%)

○ 이물 종류별 보고(신고) 건수

연도	총계	벌레	곰팡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	기타야물
2008	1,949	845 (43.4%)	188 (9.6%)	153 (7.9%)	27 (1.4%)	89 (4.6%)	647 (33.1%)
2010	8,597	4,426 (51.5%)	637 (7.4%)	752 (8.7%)	111 (1.3%)	500 (5.8%)	2171 (25.3%)
2011	5,624	2,825 (50.2%)	557 (9.9%)	554 (9.8%)	84 (1.5%)	313 (5.6%)	1,291 (23.0%)
2012	4,733	2,342 (49.5%)	570 (12.0%)	505 (10.7%)	73 (1.5%)	283 (6.0%)	959 (20.3%)

소비 유통단계: 12.7%, 제조단계: 7.4%, 조사 불가: 19.5%, 제조 및 이외 의심: 60.4%
발생 순위: 면류 > 커피 > 과자류 > 음료류 > 빵 또는 떡류

업계와의 이견 사례(2)

● 식염 함량 표시제 도입

- 전통식품의 특성 감안 선별 적용 필요
- 전통발효식품의 식염 영향, 심도 있는 연구 필수
- 한국인의 식습관 고려 최선의 방안 제시 필요
- 나트륨 적정 섭취량에 대한 학계의 이견 검토 요망



● 불량식품 단속 기관의 난립

- 검·경, 식약처, 시도 보건 기관 등
- 전문 기관에 의한 통일된 단속 필요

VI. 대 소비자 안전관리의 개념 정립 필요



과학과 감성의 이해 부족

▶ 과학적 사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차이

→ GMO, 방사선조사 식품



▶ 안전개념이 안심개념으로 침투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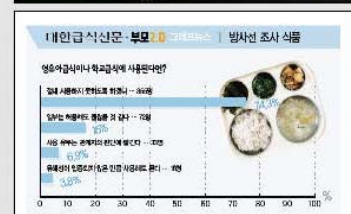
→ 광우병, 이물사건



▶ Hardware와 software의 충돌

→ 지식(hardware)과 이해(software)의 간극

→ 일방적 communication 실패



Hazard와 Risk의 혼동

▶ **위해(Hazard)**는 직접 위험이 있는 개념-독극물

▶ **위험(Risk)**은 위해의 정도(발생 가능성)-자동차



▶ 위해의 정량적 분석에 따른 위험 수준 설정 필요

-Risk assessment 필요

▶ 대 소비자 소통의 활성화 필수



안전위협도 와 안심위협도

안전 위협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제시되는 위해의 정도

안심 위협도: 개인적 인지에 따른 위해도(심리적 개념)

- 안전 위협도가 무시할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안심 위협도가 매우 커서 소비자 불안을 야기하기도 함
- 이의 대처 방안은 지속적인 과학적 사실의 알림과 이해
도 제고가 필수임



위해성의 확대해석(예)

- **중국산 멜라민 공포**
- 분유, 과자 등 어린이 관련



- **석면 탈크**
- 베이비파우더, 화장품 등



Risk와 Benefit의 관계 설정 미흡

▶ 위험 수준을 낮추면 비용상승, 수익 감소

→ 식품 보존제 사용 : 저장기간 연장, 최소 열처리

▶ 소비자의 비용 부담 수준과 관계

→ 과도한 안전성 제고로 제품가격 상승(GMO)

▶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의 수용 한계(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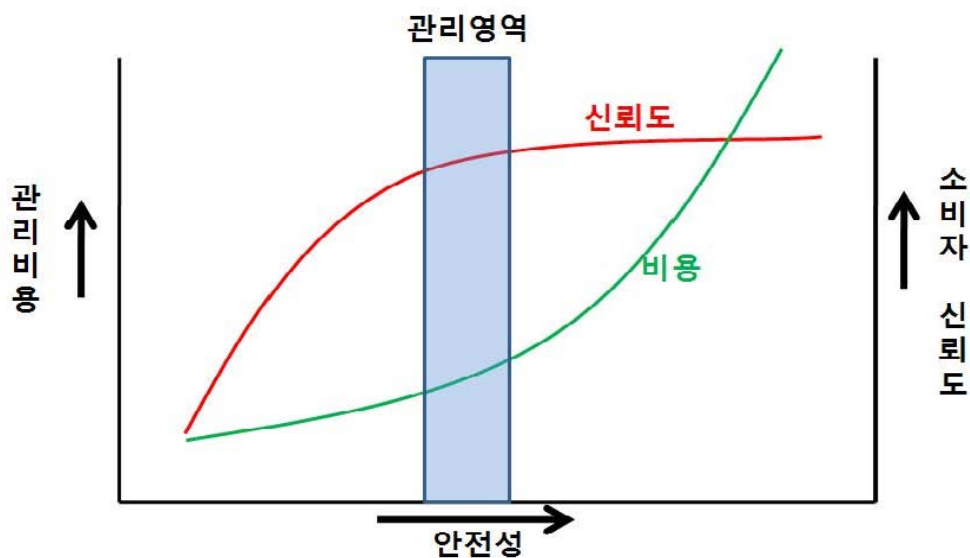
→ 비용과 소비의 연계성 고려

▶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위화감 조성 가능

→ 계층별 위화감으로 사회불안요소 확대



관리 비용과 성과의 균형 유지 필요



안전관리 비용과 소비자의 신뢰도

Ⅶ. 정부 관련 기관의 역할 담당



관련 정부기관의 안전업무 협력 방안수립(1)

- 관련 부처별 담당기관 협의체 구축, 회합 정례화
- 수집정보의 공유 시스템 구축
- 공동교육, 공동사업, 연구과제의 공동 수행 검토
- 인력의 상호교류 시스템구축
- 안전관리, 분석, 정도 관리 내용 공유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와의 소통 활성화 및 정보 확산

관련 정부기관의 안전업무 협력 방안수립(2)

● Risk assesment와 Risk management의 관장분리

- 한 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치우칠 우려
- 업무를 분리하여 전문성 부여 필요
- 상호 관리와 견제 필요



● 정부 안전관리에 대한 사고 전환

- 사후 관리에서 사전 관리 방법으로 획기적 전환
-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효율성 제고안 검토

관련 단체의 역할(1)

● 소비자 단체

- 충분하고 전문적인 정보 수집 및 정확한 상황 파악 필요
- 분야 별 전문가 확보 및 사안별 전문 평가 결과 도출
-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중재 역할 수행
- Risk communication 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생산자 단체

- 자체 안전점검 조직 구성 및 운영
- 사전 안전관리 예방 방안 강구 필요
- 사업체 별 상시 안전 점검팀 운영
-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수행(법, 운영방법, 현장 교육 등)
- 소비자교육에 적극참여
- 제조업체의 개방, 투명성 제고



관련 단체의 역할(2)

● 언론계

- Risk communication에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
- 확실한 근거에 의한 보도 원칙 고수
- 선정성 언론 보도 보다 사실 전달에 역점
- 발표될 특정사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 국익차원에서 이익, 불이익을 검토 후 보도 결정
- 소비자의 불안 심리 촉발, 유도형 보도 자제



● 학계

- 전문가로서 올바른 판단을 위한 자문역 담당
- 안전 관리에 필요한 전문 정보의 제공
- 가장 쉬운 언어로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 전문 안전관리 인재 육성에 책임
- 소비자, 업체, 관련기관에 대한 공정한 의견 피력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기능 강화

● 도, 시, 군의 관리기능 한계

- 소수의 보건위생과 직원이 관리
- 관리 대상(제조업, 외식업 등) 대비 관리직원의 절대부족
- 전문인력확보 미흡

●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 보강 및 운영

- 시, 군 안전관리 업무의 이관 관리 검토
- 전문인력, 행정관리 능력의 보강
- 인사, 관리 기능의 독립, 외압 배제의 제도적 보장
- 가장 근거리에서 관리 가능

● 식약처 지방청 및 위생검사기관과 연계 검토

- 기준 규격의 적용 여부 검증
- 관리, 검사 결과의 점검
- 새로운 관리 기법의 전수, 교육 기능
- 위생검사의 위탁 관리

위생안전관리 업무의 분담

기관과 단체의 업무 분담

국가기관	기업(협회)	소비자단체
- 기준규격의 설정 - 위해분석, 위험수준 설정 - 국내외 정보수집, 제공 - 수거분석 - 위험관리 - 대소비자 홍보 - 업체교육	- 소비자 안심운동 - 대소비자 제조공장 견학 - 원료 사전 안전관리 - 공장의 위생점검 위탁 - 유통식품의 분석/관리 - 위해, 위험이 아닌 감성의 관리	- 소비자 교육 - 알권리 충족 - 좌담회 개최 - 학계, 업계, 연구계의 교량 역할 - Risk communication - 주역 담당

VIII. 대 식약처 건의 사항



안전관리의 접근 방법 확립

● 안전관리(과학적 관리)

- 국가기관에 의한 총괄관리
- 과학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관리방법 제시
- 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수행
- 각종 분석방법, 예방방법 개발 보급
- 안전관련 관리방법 교육

● 안심관리(감성적 관리)- 소비자 이해도 제고

- 기업에서 소비자 고발센터 적극 운영(CEO, 관리책임자 참여)
- 관련 협회에서 안심관리 조직 운영
- 소비자 단체에 기능 부여
- 대학, 연구소 위탁 방법 검토
- 유통제품의 분석업무 위탁(위생검사기관)

사전예방 대책의 획기적 변화(1)

● GAP의 연차적 도입 (농식품부 협업)

- 생산자의 집단화 유도 필요
- 생산여건의 개선지원
- 관련 기법의 교육 우선

● HACCP의 합리적 도입

-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 도입
- 모델 공장건설도 제조업체의 혼란, 과다 투자 예상
- 전문직원의 복수관리 방법 검토

● 안전/제조 기술지원단 운영

- 지역 전문가 집단(대학, 연구소) 활용, 지원단 구성 운영
- 주기별 공장 방문, 안전진단 및 건의
- 직원의 맞춤형 위생/안전교육 수행



사전예방 대책의 획기적 변화(2)

● 국내외 규격기준의 사전 예고제 도입

- Codex, 미국, EU 등의 규격 기준의 사전 예시
- 법, 규정, 고시 등의 대 업계 효율적 전달방법 검토
- 지역 전문 지원단 활용, 교육 실시

● 모든 관리제도, 관리결과, 정보의 투명성 확보

- 국가관리 현황, 정보, 결과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 정보 공유 시스템의 구축

- 범 부처별 식품안전정보센터의 운영, 활용
- 현 전담 대상 별 수집정보의 공유 시스템구축
-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집정보의 공유방법 검토
- 수집 정보의 효율적인 가공, 전파시스템구축

과학기반 관리의 정착 필요

● 확고한 과학기반에 의한 정책추진

- 지속적인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국내외 연구동향, 정보 수집 필요
- 전문인력의 꾸준한 확보(Out sourcing도 필요)

● 일시적 국민정서(감정) 보다 일관된 과학기반 정책 추진

- 일시적 여론 기반 정책에 한계 인식 필요
- 과학 기반 없는 정책은 혼란 가중

● 비 전문 소비자에 대한 과학 기반, 이해, 설득 노력

- 과학적 근거에 의한 정책 추진의 타당성 설득
- 일시적 감정보다 이성에 의한 관리 정착 필요
- 국가적 이익과 손실 비교 분석 필요

식품관련 법령의 재정비(1)

• 식품 안전 기본법

-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분산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때 제정됨
- 안전관리 업무가 통폐화 된 시점에서 이 법의 존폐 혹은 전면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대두
- 식품 위생법 보완으로 기능수용 혹은 전면 개편 필요성 대두 [위원의 구성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
- 식품안전위원회의 기능을 재설정
- 산 · 학 · 관 · 연으로 구성된 민간 주도형 식품위생법 개정위원회구성

식품관련 법령의 재정비(2)

◦ 기타 식품관련 법령 정비

- 식품 관련 법령이 식품안전 기본법,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28개로 다원화

◦ 수입식품관리 특별법 제정 필요[의원 발의, 계류 중]

- 국민 총 섭취 열량의 60%차지

◦ 관련 법, 규정, 공전 등 사용용어의 통일

- 법, 규정간 사용 용어의 통일 및 정비(예 GMO 등)
- 정확한 용어의 정의 및 관련 기관 간 공유

식약처 관장 법령

- 총 괄 : 법률 11개, 대통령령 14개, 총리령 18개

식 품	의약품
① 식품안전기본법	⑥ 약사법
② 식품위생법	⑦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⑧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④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⑨ 화장품법
⑤ 축산물위생관리법	⑩ 의료기기법
	⑪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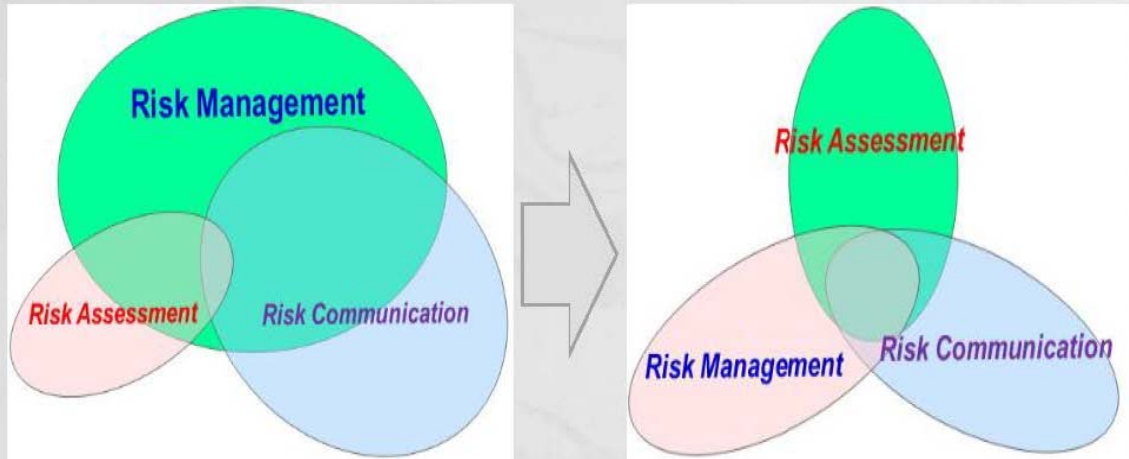
자료:식약처 기자포럼[2013. 4.3.]

조직 · 기능 · 제도(1)

▶ Risk assessment기관의 독립성 부여

- 과학적 식품안전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서
risk assessment를 근거로 management가 되어야 함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안전관리 부서[식품안전 등 행정업무 부서]소속기관으로 독립성 확보 어려움
- 과학적 사실이 기반되지 않는 위해성 관리 업무는
사회적 감정에 휘둘릴 수 있음
[광우병 사건, benzopyrene사건, 쓰레기 만두 사건 등]

합리적 Risk analysis를 위한 균형된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와 위해성정보전달의 관계도



조직 · 기능 · 제도(2)

◦ 식품 관련 조직의 세분화에 따른 문제

- 현재 식약처의 식품관련 업무는 3국 16개과로 세분화
-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은 7개과로 구성
- 조직 세분화는 전문성, 직위 확보 등 장점이 있으나 관련업무의 통일성, 총괄기능 결여, 업무 한계의 중복, 모호, 책임행정 수행 곤란
-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저하
- 대국 대과로 전환, 효율성, 통일성, 신속성 제고 필요

대 소비자 및 생산자 등에 대한 홍보, 교육 기능 강화(1)

- Risk communication은 전국민 대상 규제기관에서는 크게 관심 가져야 함
- 잘못 전달된, 잘못된 정보는 소비자 혼란은 물론 국가 신임도에도 크게 영향을 줌(라면우지사건, 포르말린 사건 등)
- 과학적 기준에 의한 안전 개념을 기초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정서적 안심 개념으로 확산시켜야 할 것임

대 소비자 및 생산자 등에 대한 홍보, 교육 기능 강화(2)

- 교육·홍보 기능을 갖는 법적 지위가 있는 조직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충분한 설득력 있는 정보 제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해 요인에 대한 능동적 수용 여건 조성
- 대 언론 홍보를 위한 특별반 구성 운영
- 책임 있는 소비자 단체의 적극 활용
- 기업체도 대 소비자 안전 관리 홍보에 참여
- 다양한 홍보 매체의 제작 및 보급

Risk communication의 단계



정보수집, 분석 및 가공전달 기능 효율성 제고

- **국내외 규격, 기준, 관련자료 수집 강화**
 - 국가, 기관이 수집, 전파
 - 기업정보 계속 수집 분석
- **수집 정보의 분석, 가공의 합리적 수행**
 - 위험 예측, 기업 대비 방법 제시
- **식품관련 대학교수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 모니터링 조직 확보, 지속 활용
- **정보의 근거 및 투명성 확보 절대 필요**

식약처의 소통 활성화 방안

소통 전담기구 설치

- 정책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
-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포럼」 실시
- 「소통협력과」를 신설,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

소비자 참여 활성화

- 위생점검 과정에 소비자 참여 및 요청대상 기관 확대
 - 소비자 20인 이상 → 5인 이상으로 완화
 - 식약처 → 지자체까지 확대

온라인 국민제안센터 설치

- 현재 운영중인 1399 민원신고와 통합, 신속하게 대응
-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자료:식약처 기자회견(2013. 4.3.)

실행 가능성 낮은 규정 등의 폐기, 개선

- 시민 식품감사인 제도 등 ; 유명무실
- 위해 가능성이 낮은 전통식품의 HACCP 의무 적용에 따른 영세업종의 경제적, 기술적 부담 가중
- 영양표시제 : 총괄적 검토 필요
- 허위 표시 금지의 경우 보편적, 상식으로 알려진 효능, 효과를 선택적으로 허용필요
- 위해 식품 등에 대한 정의 등 명확, 확실성 제고 필요
- 허위 과대 광고 등 유권해석 오류에 따른 무죄 확정 시 후속 조치 필요

기준 규격의 설정 및 적용/운용[1]

- ▶ 식품위생법(7조 및 9조)에는 판매하는 모든 상품의 규격을 설정·운영하고 있음
- ▶ 규격 설정과 내용은 관련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과학적 기반에 따라 설정하되 1년 혹은 반년 단위로 개정해야 할 것임
- ▶ 특히 비용과 효과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전문적 평가가 필요함,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것은 제외해야 함
[식용유의 benzo[a]pyrene, 가열/ 비 가열 제품의 세균 수 규정 등]

기준 규격의 설정 및 적용/운용[2]

- Melamin, 방사능 기준 등은 모든 식품에 적용할 필요 없음
 - 오염 가능성 지극히 낮음
- 김치 중 납 등 중금속 검사 등도 과도한 규정임
- 자가 품질 검사 의무제도의 재검토-사전검사로 전환
[사전검사가 아닌 사후검사는 의미 상실]
- 식품첨가물의 경우 화학적합성품을 구분, 관리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염의 종류(K, Na, Ca 등)에 따라 규격을 정하기 보다 통합 관리가 필요

검사·분석 기관의 효율성 제고

- ▶ 검사기관의 통폐합 유도 [난립에 따른 비용상승]
- ▶ 검사 결과를 통합, 위해성이 지극히 낮은 항목과 검사하여 불합격 비율이 낮은 항목 면제 필요
- ▶ 지방청과 지자체 간 분석항목을 세부로 조정, 효율성 제고
 - 지방청: 위해 항목중심,
 - 지자체: 규격기준 적합성
- ▶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유통 중 식품을 수거, 검사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 수입제품의 검사 항목에 이물 검사 항목 추가

식품안전관리 역량의 재 배분(1)

- 사건 예방활동에 역량 강화
 - HACCP, GAP, 점차적으로 제조업 특성에 맞게 도입
 - 정보 수립 및 확산
- 식중독 발생 원인 별 역량 재 배분
 - 식중독 사고의 58.6%는 생물학적 원인[식중독 미생물], 자연독[1.26%], 화학물질[0.19%]
 -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은 가공 식품이 아니라 조리식품임. 따라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에 역량 집중
 - 현 관리 업무는 가공식품에 치중

식품안전관리 역량의 재 배분[2]

◦ 사후에서 사전 원인 제거 및 규제 강화로 정책 전환

- 현재 문제되는 주된 원인은 원재료나 중간소재임
- 이물 등 일과성 문제는 파급 제한, 위해도 낮음
- 현재 집중된 가공 식품 분야에서 식품 소재, 외식업체 등
원인 제공처에 사전 관리 집중 필요

- 업체 스스로의 관리 역량 강화에 역점, 스스로 해결 가능토록 지원

◦ 한식 세계화에 알맞은 발맞춰 기준규격 이해의 차이 gap 해소

- 미국에 판매하는 떡류 상온유통 적발 등

식약처 기준 및 관리 강화 방안[1]

식품안전기준 강화

• 부처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 통일(12월)

· 예 : 통조림 식품 세균기준 등

•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안전기준 제정 및 검사법 마련(연중)

· 신종 화학물질, 변종 대장균 등

• 농약,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기준 설정 확대(17)

- 농약 432종/동물용의약품 156종 → 농약 550종 / 동물용의약품 200종

학교주변 식품위생관리

• 학교주변 문방구점 등의 식품판매 및 학교매점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 학생안전지역 조기지정(안행부, 교육부 등 협업)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12월)

자료:식약처 기자포럼(2013. 4.3.)

식약처 기준 및 관리 강화 방안(2)

수출국 현지 실태조사 확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6월), 교역규모가 많은 국가들과 협약 체결 후 추진
 - 위생관리 취약시설 업체에서 생산된 불량식품 수입금지 등 조치
- 수입물량이 많거나 부적합률이 높은 지역에 현지사무소 설치 추진
 - 안행부, 외교부와 협조하여 추진
 - 美 FDA는 중국 등 10개국 13개 현지사무소 운영 중

사전에측 수입검사시스템 구축

- 위해식품의 과학적 선별을 위한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 구축(11)
 - 해외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이력을 토대로 서류·관능·정밀검사 대상 분류

이력관리로 불량수입자 퇴출

- 과거 부적합 이력을 분석, 관리수준 차별화(우수·일반·특별 차등관리)
- 우수 수입자는 통관절차를 간소화, 불량 수입자는 특별관리

자료:식약처 기자회견(2013. 4.3.)

IX. 식약처 중장기 정책방향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분리(1)

◦ 필요성

- 식품과 의약품은 사용목적이 크게 다름

- 식품 : 생명유지, 먹는 즐거움
- 의약품 : 질병치료

- 사용 빈도

- 식품 : 전국민이 일생 동안 매일 섭취
- 의약품 : 환자만 섭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분리(2)

◦ 전문성 및 관리 방법의 차이

- 전문학문 분야가 다르고 사용 원료의 현격한 차이
- 식품은 원부재료의 안전성, 가공제품의 영양, 위해성 검증
약품은 최종제품의 기능, 독성만 관리

◦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 · 관리의 장점

-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 할 수 있음
- 관계가 약한 2 분야가 한 기관 내에서 관리 , 효율성, 전문성 결여

’12년 산업통계의 식의약 분야 비교[단위: 조원]

	식의약 산업	I	II	III	IV	V	VI
생산액	141.97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 의약품]	의약외품
		113.93	15.71	7.12	3.88	(1.73)	1.32
수출액	18.33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물 의약품]	의약외품
		12.21	2.34	2.22	1.20	(0.42)	0.35
수입액	50.03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생물 의약품]	의약외품
		39.98	5.85	2.93	1.10	(0.67)	0.17
시장 규모	173.67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생물 의약품]	의약외품
		141.70	19.23	7.02	4.59	(1.98)	1.14

* 식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포함
* 의약품: 생물약품 포함

자료: 식약처[2013.11.]

가칭 ‘식품안전정책 연구원 설립’

- 식품안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think tank역할
- 국내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연구, 정책방향, 위해 예측 등 담당
- 현 보건산업진흥원 및 보건사회연구원 기능, 인력 활용
- 급변하는 국내외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육성

기술지원 전문인 조직운영 [중소 식품제조업대상]

- ▶ 현재 24,000여 식품 기업 중 연간 매출액 20억 이하가
90% 수준으로 기술여건 열악
- ▶ 장기적인 기술지원으로 불량식품 생산 가능성을 사전 예방
- ▶ 은퇴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 식품기술사회 회원 활용
[해당 기업체에서 활동한 전문인력]
 - 한 전문가가 같은 지역의 5~6개 업체 책임관리
 - 비용은 정부와 기업이 50%씩 지원
 -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

X.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

[산업체 요구를 중심으로]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업체의견 취합][1]

- 식품 등의 재검사(법 제2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전제 조건 없이 재검사
- 신호등 표시제(법 제12조)→ 영양성분 단순 표시로 혼란 초래
- 불합리한 기준 규격 검토→ 벤조피렌, 멜라민, 냉동식품 미생물 규격
- 정부 부처별 공식 분석결과 공유 상호 인정
→ 식품위생검사기관(식품위생법제24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축산물위생관리법제20조], 한국인정기구(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 해외 OEM 업체 안전 점검→ 식약처 인증, 해외 검사기관 결과 인정
- 신소재 식품원료 인정→ 국내 식경험이 없더라도 FDA GRAS 등록 등과 같이
제외국 자료 구비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 제출 인정 및 서류 간소화 필요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업체의견 취합][2]

◦ 건강기능식품

- 질병 발병 전 관리 필요성 대두(셀프 메디케이션)
- 세계 시장 규모 3,500억불(한국 1%수준)
- 고시형의 과감한 확대(원료 포함)
- 기능성 심사 기준의 재 검토 및 신속 처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개정 필요 사항
- 정당한 판매 활동을 위한 경품제공 허용 검토
- 개별 인정형 원료 심의 개선필요 → 구체적 가이드를 위한 사전
상담 제도 도입,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 제한적 공개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업체의견 취합)(3)

-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선
→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식품첨가물 구분 제거,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 사용용도 포함 필요
- 형사처벌 강화(형량 하한제, 부당 이익환수제 등)
→ 비 고의적 위반을 행정 처분으로 대체
- 형사입건 후 무죄 확정시 기업 이미지 복원, 피해 보상 방법검토
- 처벌 강화 위주에서 계도로 행정 지도 유도(선 계도 후 처벌)

결 론

1.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가장 우선인 사항임
2.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료 처리, 가공, 유통** 등이 복합적으로 완벽하게 관리되어야 함
3.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 관리**에 집중 해야 할 것임
4. 식품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관리 능력을 집중 해야 할 것임
5. 안전관리 기관간 확실한 **업무 분담**과 **상호 협력**이 우선 되어야 함
6. 법과 기준 규격은 **시대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되어야 함
7. **편익 분석**이 합리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와 산업을 함께 보호 필요 함
8.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규제는 **산업육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함

우리 식품안전관리가 한 단계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2. 식품안전 주요 정책방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강 봉 한





Profile

강 봉 한

학 력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경 력

보건사회부 입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품질과장
식품관리과장
창의혁신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장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 주요 정책방향

2013. 12. 9.

순서

- I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의의 · 비전
- II 식품안전분야 주요 성과
- III 식품안전 정책방향
- IV 5년 후의 미래상
- V 맺음말

I.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의의·비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의 의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 구현

- 국민 개개인의 행복 실현을 위한 기본요건인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 국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반영

- 법정부적으로 **불량식품** 근절, 식품안전강국 구현



“불량식품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4대악(惡)에 대해서 반드시 확고하게 뿌리 뽑겠습니다” (12.12.16)

“국민 행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요건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국민안전 지대를 만드는 것”,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惡)인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13.3.13)

먹을거리 안전관리 일원화

분산 (농식품부, 식약처 등)

	생산	수입	유통	소비
농산물	■	■	■	■
수산물	■	■	■	■
축산물	■	■	■	■
가공식품	■	■	■	■

일원화 (식약처)

- 일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위탁

	생산	수입	유통	소비
농산물	■	■	■	■
수산물	■	■	■	■
축산물	■	■	■	■
가공식품	■	■	■	■

■ 식약처 ■ 농식품부 ■ 식약처 + 농식품부 + 해수부

일부 위탁된 업무는 식약처와 농식품부 또는 해수부가 교차확인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5

II. 식품안전분야 주요 성과

국정과제 주요 성과



1. 불량식품 감시 감독 강화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 및 정보공유, 시민참여



법정부 차원의 「추진단」 출범

- 총리실, 식약처, 농식품부, 감·경 등 합동 추진단 설립(4월)
- 5개년 종합 대책 수립(5월)
- 시민사회단체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연중)

상시 기획감시 실시

- 축산물 전분야(5~6월), 분말제품(8월~10월), 추석성수식품(9월), 떼다방(11월) 등 법정부 기획감시 실시

시민감시단 운영

- 소비자, 학부모, 생산/유통 관련자로 구성된 시민감시단 운영(연중)
- 쌍방향 온라인(블로그, SNS 등) 홍보도 강화

9

2. 식품위해사범 영구퇴출

처벌 강화, 부당이득 박탈로 상습 불량업자 근절

고의적 식품범죄
사범 처벌 확대

부당이득
10배 환수

10

고의적 식품범죄사범 처벌 강화

- **형량하한제** 적용 범위 확대
 -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죄
 -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

부당이득 10배 환수

-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판매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환수

식품위생법 개정('14.1.31시행예정)

11

2. 사전 예방 강화

식품안전 위해요소 차단 및 인프라 구축



12

식품안전기준 강화

- 농·축산물, 식품의 상이한 **안전기준 통일**(10월)
 - 상이하게 적용되던 병·통조림에 대한 납, 세균 안전기준 통일
- 원활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법적 기반 구축
 - 관계기관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 개정(7월)

학교주변 식품위생관리

- 학교매점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14. 1.31 시행)
- 학생안전지역 조기지정(안행부, 교육부 등 협업)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연중)

13

집단급식소 안전관리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 학기 초 집중 위생점검(3월, 9월)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22개소 → 87개소 설치·신청 완료)

식품안전인증(HACCP) 적용 확대

- 식품안전인증 의무대상 확대
 - (축산물) 도축장 의무화 → 집유장('14~'16), 유가공장('15~'18)
 - (식품) 어묵, 배추김치 등 7개 품목 → **어린이 기호식품**, 다소비식품 등

부적합식품 차단·추적관리 강화

-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확대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 편의점까지 확대 유도(현재 41,528개 매장 도입)
-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 쇠고기 →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식품위생법 개정(7.30))

14

4. 수입식품 관리 강화

수출국 현지부터 촘촘한 안전관리



15

사전에측 수입검사시스템 구축

- **위해식품의 과학적 선별을 위한 사전예측 수입검사시스템 구축(11월)**
 - 해외제조업체, 수입자 등의 이력을 토대로 서류·관능·정밀검사 대상 분류

일본산 수입식품 임시특별조치 시행(9.9)

-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방사능 검사정보 공개 확대
- 일본산 수산물 검사체계 강화를 위한 감천항 검사소 신설(11.5)

16

5. 식품표시제도 개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제공으로 알 권리 보장



17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농식품부 주관)

- 원료농수산물 : ('12) 868개 품목 → ('13) 872개 품목
- 음식점원산지 대상 품목 : ('12) 12개 품목 → ('13) 16개 품목

영양성분 표시대상 품목 확대

-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
 - 백화점, 대형마트의 푸드코트에 영양표시 확산 추진(6.11~)

식품용기 구분 표시제 도입 추진

- 식품용에 적합한 용기류에만「식품용」으로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 혼란 방지
 - 「식품등의표시기준」 행정예고(10.2)

18

6. 소비자와 소통 활성화

정보공유와 열린 소통으로 투명한 식품안전행정 구현



19

소통 전담기구 설치

- 정책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포럼」 실시(분기별)
- 「소통협력과」를 신설(3.23), 대국민 소통창구 일원화

소비자 참여 활성화

- 위생점검 과정에 소비자 참여 및 요청대상 기관 확대(7.30 법 개정)
 - 소비자 20인 이상 → 5인 이상으로 완화
 - 식약처 → 지자체까지 확대

온라인 국민제안센터 설치

- 현재 운영중인 1399 민원신고와 통합(7.1), 신속하게 대응
-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

20

IV. 식품안전 정책 방향

1.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

생산 주기별 맞춤형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확보



안전성 조사 및 지도교육 강화

- 생산부처와 협업으로 농약, 중금속, 동물용 의약품 등 생산단계 위해요소에 대한 집중관리 실시
- 생산자에 대한 안전 지도교육 강화로 근본문제 해결

HACCP 확대

-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 대상 확대
 - 도축장, 김치 등 7개 품목 → 집유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으로 확대('14~)
 - 영세업체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과 병행

23

위해식품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소규모 판매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단계적 의무화 적용 ('14~)

위생 취약부분 집중관리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확대,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를 통한 어린이 섭취식품 안전관리 강화
- 대형 음식점(300m²)부터 단계적으로 위생등급제 도입

24

2. 수입 前 단계 안전관리 강화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체계 구축



25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 도입

-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사전등록 의무화
- 사전등록 된 해외 제조업체에 대하여 현지실사 시행

수입신고의 검사 효율성 제고

- 제품을 위해도에 따라 일반, 주의, 집중 등으로 차등 분류하여 문제제품 검사 강화
- 서류·관능 검사만으로 수입되는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
* '13년 3% → '17년 10%

법 조직 정비 통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기반 구축

-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6월 발의, 현재 국회 계류중)
- 식품안전정보원의 기능을 확대하여 현지실사, 해외공장 등록관리 업무 수행

26

3. 국민 소통 및 참여 활성화

정보공유와 열린 소통으로 투명한 식품안전행정 구현



27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통합하는 '식품안전정보망' 구축(14년)
- 통합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 식품위해예보 시스템 구축(15년)

맞춤형 위해소통 실시

-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소통 프로그램 마련
- 소비자포럼(일반국민, 전문가), 식의약 안방체험(대학생, 주부), 식의약 영리더(중고교생), 꿈나무 체험교실(맛벌이 초중학생 자녀)

식품등의 표시 지속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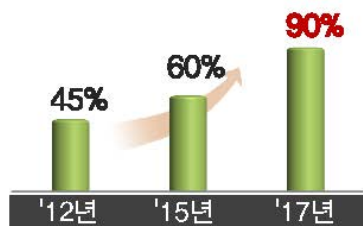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지속적 확대(13년 12개 → 17년 24개)
- 식품에 직접 닿는 기구는 '식품용'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15년)

28

IV. 5년 후의 미래상

국민의 안심 체감지수가 높아집니다

• 수입식품



• 학교주변 판매 식품



우리 아이의 식생활이 안전해집니다

• 학교앞 우수판매업소 지정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국내 · 외 불량식품이 발붙이기 어려워집니다

• 위해식품 판매 차단



• 해외제조원 우수수입업소 등록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합니다

• 국민안심제안센터 도입



• 시민감시단 구성



31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

V. 맺음말

토론회 좌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 철 호 이사장

학 력

고려대학교 농화학과(농학사)
덴마크 왕립수의농과대학 대학원 식품저장학교실(농학박사)

경 력

미국 M.I.T. 공과대학 식품영양학과 연구원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부설 식품가공핵심기술연구센터 소장
보건복지부, 식품위생심의위원
한국산업식품공학회 회장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미생물학회연합 회장
한국식품과학회장, 한국식품관련학회연합 초대회장
한국국제생명과학회(ILSI Korea) 회장
Codex 제15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의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원, 민간위원협의회 의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한국인정원 식품안전미래포럼 위원장
UN식량농업기구(FAO) 고문관(Consultant)
(현)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현)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 회원
(현)미국 식품공학회(IFT) Fellow
(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현)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토/론/문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연구소장 김 명 철





Profile

김 명 철

학 력

서울대 식품공학과 농학사

美 South Dakota 주립대학교 식품화학과 이학석사

美 Purdue 대학교 식품화학과 이학박사

「법과 의료」 최고위정책과정수료

경 력

국립보건원 및 식품의약품안전본부 보건연구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 식품규격과 및 오염물질과과장

美 하버드대 로스쿨 식품법 연구 Research fellow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평가부 및 식품평가부부장

한우 유전자 판별 T/F T/F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본부장(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국 국장(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정책관실 정책관(고위공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 T/F T/F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저감화추진단 법령제도부 부장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연구소장

토론문 :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 처벌 강화 위주에서 계도로 행정 지도 유도 (선 계도후 처벌)

○ 미국 FDA의 사례

○ 집행의 기준 6가지

- ① 위법·위반 사항의 경중 (Seriousness)
- ② 위반 식품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민의 수
- ③ 영향을 받는 국민의 영향 정도
- ④ 위법·위반 증거의 증거력
- ⑤ 집행 조치가 성공할 확률 (집행종류의 선택)
- ⑥ 위법·위반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과 시급성

○ 집행 철학의 변경

- 사법집행보다는 행정집행

행정집행보다는 법준수 유도정책 프로그램

○ 행정집행의 시작

■ 감시관찰목록 (List of Inspectional Observation)

- FDA from 483(양식 483)의 발부
- 경미한 위반사항
- 개선조치가 수월한 사항 등을 지적
- 향후 지적받은 회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임을 예고

■ 서면 경고(Warning Letter)

- FDA 집행기능 중 가장 다수 그리고 중요한 부분 차지
- 중한 위반사항
- 또는 양식 483에서 지적한 사항이 기한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
- 경고를 받은 식품 또는 시설은 부정불량 또는 표시기준에 위반될 수도 있음을 FDA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절차

- 서면경고 또한 15일 이내에 수취인으로 하여금 개선조치를 취하고 FDA에 결과를 보고토록 함
- 이후 적절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FDA가 판단시 압류, 판매금지 등 집행 조치 시행

□ 중소기업 기술지원 조직 설립

- 우리나라 식품산업 규모
 - 종업원 50인 이하 기업체가 전체의 97% 차지
 - 매출은 총 기업체의 3%가 전체 매출의 74% 차지
- 영세한 식품 기업체의 안전관리(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지원 필요
 - Control tower 부재
 - 식품진흥기금 등 예산은 하드웨어 지원에 치중

□ 가칭 「식품안전정책 연구원」 설립

- 식품안전정책 수립의 thinktank 역할 진공상태
 - 한국식품연구소(협회)
 - 한국식품위생연구원
 - 보건산업진흥원(w/ 보건의료정책연구원)
-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식품연구소 역할의 재정립 필요
- 정부, 산업체 및 소비자 단체의 Contact point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교역할 필요

토/론/문

한국식품과학회장 박 지 용





Profile

박 지 용

학 력

연세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Massachusetts, U.S.A.,

Food Engineering 석사

Texas A&M University, College Station, Texas, U.S.A.,

Food Science and Technology 박사

경 력

(주) CJ제일제당 연구소 선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식품안전관리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

토론자 제언

글로벌 시대에 세계는 전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조선, 반도체, 가전제품, 스마트폰, 자동차 등 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초일류 국가로 발돋움 하였다. 그러나 IT와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하는 것은 알지만 식품산업이 모든 국가 GDP의 1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큰 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많다. 베스트 브랜드 평가에서 삼성전자에 앞서는 기업으로 코카콜라와 맥도널드가 애플,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GE, 인텔과 더불어 포함되는 것을 보아도 식품기업의 비중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Nestlé, Kraft, PepsiCo, Coca-cola, Unilever 등 글로벌 식품회사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식품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많은 유명 커피나 음료들이 외국 회사 제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들도 많다. 물론 현재 삼성의 모태가 된 CJ제일제당을 비롯하여 농심, 삼양사, 오뚜기, 롯데, 대한제당, 한국야쿠르트, 대상, 남양유업, SPC 등 식품회사가 부단한 노력을 하여 매출 1조원 돌파 기업이 되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품질을 외국 제품에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식품회사라도 Nestlé와 같은 글로벌 식품회사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로, IT나 자동차 회사인 삼성이나 현대에 비하면 매출 규모나 수출 실적으로 보면 이제 걸음마 수준이다.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는 식품산업을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발하였다. 정부 조직도 농림축산식품부로 “식품”이 조직 명칭에 남게 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확대 개편되어 올해에는 식품산업 부문 연구비가 가시적으로 확대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식품산업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막걸리, 소주, 김치 등이 수출 효자상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정도로 겨우 인식하는 듯하다.

아직까지도 언론 매체에서 가공식품은 안전하지 않으며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상을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 가공식품이 편의성과 다양성을 가진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며 먹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고마운 제품이라는 것을 망각하게 한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맛 있는 제품을 즐길 수 있다는 고마움을 느끼는 대신 가공식품을 위험한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안감을 느끼게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소비자나 소비자집단은 비전문가적 지식과 잘못된 인식으로 가공식품을 무조건 불신하는 것은 아닌가? 언론 매체에서는 식품을 소비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좋은 소재로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환경과 분위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슨 역할을 하였는가? 잘못된 인식과 그릇된 행동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나? 마스크에서 MSG를 화학합성품이며, 해로운 물질이라고 오도(誤導)를 하여도 식품안전에 기여하였다고 상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러다간 누가 하얀 설탕도 생긴 것으로 보아 화학합성품인 슈크로오스라는 물질이라고 하여도 그대로 니들 기세이다. 최근엔 정부에서 내건 4대악 중 불량식품이 들어가 있어 난리이다. 불량식품의 정의가 무엇인가? 물론 비양심적으로 돈만 벌 욕심으로 엉터리 제품이나 몸에 해로운 제품을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식품회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량한 식품회사가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지 식약처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어떤 기업은 경쟁회사를 비방하기 위하여 상대방 회사는 화학합성품을 사용한다고 광고를 하는 회사도 있다. 또 어떤 회사는 “우리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를 한다. 식품첨가물로 방부제(antiseptic)를 사용한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 이런 것은 식약처에서 보존료(preservative)라고 표기하여야 한다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노력들을 식약처가 하고 있는 지 의심스럽다.

식약처의 역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한 결과 수출경쟁력이 생겼다고 하는 의견도 많이 있다. 정말로 중국인들은 대한민국 식품을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하는 편이고, 일본 식품이 최근 방사능 누출 사건으로 주춤하는 사이 수출이 실제 많이 증가한 것 같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러시아 시장에서도 우리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 경쟁력 제고에 식약처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정부 정책에 너무 과민 반응을 하였다가 국내 식품산업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많은 식품

회사들이 “우리를 범법자 취급하는 것 같다”고 푸념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도 보았다. 실제 어떤 대기업에서 식품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한국식품과학회와 같은 학회가 중심을 잡고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학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며, 식품과학인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계에서 비전(vision)과 사명(mission)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부단한 연구개발을 하면 식품산업도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산업부문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토/론/문

식품음료신문 사장 이 군 호





Profile

이 군 호

학 력

중앙대학교 신문대학원 수료

경 력

산업통신 경제부 기자

보건신문 부국장

제일경제(현 아시아경제) 편집담당 상무

보건신문 사장

現 식품음료신문 발행인 겸 사장

現 한국전문신문 협회 이사

現 한국초콜릿카카오협회 자문위원

現 ILSI KOREA 자문위원

現 전국FOODBANK 자문위원

現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문위원

식품안전 관리는 과학과 신뢰를 근거로 해야

식품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먹을거리도 완전하면서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안전을 넘어 완벽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안심할 수 있는 식음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100%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앞으로도 소비자 욕구를 100%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문제다. 다만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안전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과학의 도구를 끊임없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식품의 안전성은 또 과학을 통해 규명된 것이라 할지라도 야누스적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어떠한 결과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이해와 불안으로 나뉜다. 즉 안전성이 강조되면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근 등 녹황색 채소와 해조류에 많이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항산화물질로서 암이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베타카로틴 보충제나 첨가물에 대해서는 인체에 좋지 않다며 먹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다. 또한 콩은 밭에서 나는 식물성 고기라고 추켜세우면서도 콩의 성분인 레시틴을 첨가물(유화제)로 사용하면 위험요소가 있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해하는 것이다.

오늘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이란 주제 발표에서도 강조됐지만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고개가 많다.

최근 들어 일부 학자 내지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을 빙자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한 불량지식을 스스럼없이 발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식품안전 당국으로 하여금 정책을 펴나가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정치권이나 검찰, 경찰 등 비전문가 그룹이 제기하는 안전성 문제도 상당수의 것들은 고스란히 국민과 소비자의 피해로 전가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커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미 주제 발표에서 안전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어 여기에 덧붙이는 것은 발표자에 대한 결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당국에 대한 충정으로 몇 가지 제안코자한다.

언론은 생리적으로 위험정보를 좋아하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일부이긴 하지만 위험을 증폭해야 권위가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식생활에서 현재처럼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시기는 없다고 보면서도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의 잔류농약, 축산물의 항생제 사육 등을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언론이 소위 전문가와 합작해 이의 불안전성을 침소봉대한 선정적 보도로 소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도록 한 사례는 수없이 많고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계 또는 전문가 그룹 중 상당수는 생리작용의 이해 없이 단편적인 실험결과만을 가지고 불안감을 갖게 하는 많은 불씨를 제공해왔다. 불안을 조장하기는 매우 쉽다. 그렇지만 안전을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많은 자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이나 소비자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려면 국회의원이나 언론, 소비자단체들이 부당한 문제제기와 폭로성 발표에 대해 감-을 관계의 압력이나 시류에 편승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싶다. 과학을 바탕으로, 과학으로 말하며, 과학적 판단을 통해 어떠한 힘에도 굴하지 않는 이해와 설득, 소통의 정책을 펴나가 줄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건이 터지면 허둥지둥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 약방문식 안전관리 보다는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 정비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파트너십 형성, 눈높이 교육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량을 모은다면 식품안전관리의 성과는 매우 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의 하나로 지목하고 이의 근절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불량식품 근절은 당연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의 원천은 법 위반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너무 광의로 해석되는 내용이 많아서 대기업들조차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기업조차도 그러한데 영세기업은 어떠하겠는가.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식품관련 모든 법을 기록한 책(법전)들이 난해하게 돼 있어, 이를 보다 쉽게 정비하는 것도 업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이 될 것이다.

80% 이상이 영세기업인 국내 식품산업 구조에서 아무리 훌륭한 법이 제정됐다하더라도 업계가 수용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규제 당국은 이러한 국내 식품업계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진흥 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생산 기반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생산 및 가공시설에서부터 안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간간히 지적되고 있지만 항상 첨가물이 많썩이다. 대기업들은 기업 이미지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일 현실이다. 모든 것이 영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근래 들어 합성첨가물은 문제가 있고 천연 및 식품원료에서 추출한 첨가물은 안전한 것처럼 호도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어떤 첨가물이라도 일정량 이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과용됐을 때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그 기준치 이하만 사용하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과학을 통해 검증됐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허용하고 국내외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되는 첨가물을 단지 자사에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는 것은 정부의 안전정책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척결해 명랑한 상거래와 소비자 혼돈 및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모든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 오늘 한국 식품안전협회 신동화 회장과 식약처 강봉한 국장이 발표한 식품안전관리과학화 및 선진화 방안에 동의를 하고 무한신뢰를 보내면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토/론/문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이 향 기





Profile

이향기

학 력

성신여자대학교 화학과 졸업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학박사

경 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의료분재조정원 조정위원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약사심의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 심의위원
식약처 식품위생 심의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식품안전관리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방안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선방향

○ 과학기반 관리의 정착

- 각종 분석방법, 예방방법 개발 보급은 물론 제품을 관리할 수 있는 신속한 기준규격 관리 필요.

예) 엑스트라버진올리브유의 진위여부 판별 방법, 부처간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안전 기준 및 검사법 등

- 전문성 확보 필요

식약처 담당자의 전문화 : 너무 잦은 업무교체로 전문성 약화 /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 미흡, 소통미흡 초래 등

- 과학을 기반으로 한 소통방법 연구필요

· 콘텐츠 검증 관리 필요 : 식약처, 지방청, 농림축산부, 각종 정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정보생산처가 많음/ 모든 콘텐츠가 검증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그대로 노출/ 국민 불신 초래

· 다양한 소통방법 필요 : 식품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 참여도가 낮고 참석자에게만 정보 제공

예) 이해 당사자, 오피니언 리더 등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기회 제공 과학적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gap을 줄일 수 있는 방안

2. 식품안전정책 연구원 설립

- 각 부처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조직만 늘어나는 것은 지양

예) 정보수집 등 : 식품안전정보원, 농림수산물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그린밥상, 녹색식생활정보114,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산물유통정보(KAMIS, 식품나라, 건강친화녹색식단, 영양표시정보, 스마트컨슈머,

소비자안전센터, T-Price, 식생활정보센터, 서울안전포털, 우수식품정보시스템 등

○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 / 식품안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립성 확보 필요

토/론/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조 윤 미





Profile

조 윤 미

경 력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식품표시바로알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식품안전관리 과학화와 선진화 방안

식품안전 소비자요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 올해 식품안전행정체계의 개편으로 식약처의 격상과 컨트롤타워 기능강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식품안전행정은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슈로서 향후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 우리사회의 식품안전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수준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식품안전행정의 과학화와 선진화 과제는 남아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할 큰 방향과 과제를 짚고 논의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위생법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한 기준규격 합리화, 예방중심, 소비자 중심적 패러다임 구축

-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은 과거형 패러다임으로 지금의 식품안전 문제를 포괄하는데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전예방적 원칙에 근거하여 국가적 식품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소비자중심적 식품행정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형태나 구성요소를 가진 법의 필요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 ◆ 미국의 경우 2011년 1월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을 발효하여 식품공급의 안전성을 보장 함으로서 공공보건을 더욱 양호하게 함으로 목적으로 사전예방을 강화한바 있다. FDA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예방과 위해성을 토대로 식품안전기준을 더욱 높은 비율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집행 권한을 FDA에 부여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식품기준을 국내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와 강력한 국가협력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 ◆ 지금의 식품안전 요구수준은 원료의 건강성을 포함한 영양, 건전한 식품소비문화에까지 이르고 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비과학적이며, 과도한 소비자요구로 보이는 이슈들이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짚어주어야 할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다. 지금은 이같은 과거와 현재 미래 식품안전 이슈와 식품을 둘러싼 가치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이다. 식품기업의 수준도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고 소비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렇다. 그래서 식품안전 행정이 더욱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식품안전을 둘러싼 사전예방적 원칙이라고 하는 강력한 흐름과 강화된 소비자안전, 효율적 행정체계, 효과적인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변화와 요구는 명확하다.

유연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리스크커뮤니케이션 강화

- ◆ 식품은 유독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다. 안전 이슈가 걸려있는 여러 영역이 있으나 식품은 특히 과학적 안전보다 인식되는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 그 이유는 식품이 가지는 문화적 요소의 중요성 때문이다.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위해의 정도를 놓고도 어떤 식품은 급격한 사회적 혼란과 불안감 등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무 반응이 없기도 하다
- ◆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국내외 정보의 생산과 유통, 관리 (식품안전정보원 기능),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오피니언 리더(연구자, 교수, 교사, 국회의원, 기자, 지자체실무자, 경찰 등등) 교육 및 관계망 구성, 유지, 이슈관리, 국제관계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기능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업무의 하나가 아니라 장단기 계획을 가지고 목표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 활동으로 매우 전문적인 기능이다. 특히 컨트롤타워로서 식약처가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글로벌 시장을 상대로 자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려고 하면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의 능력과 전문성, 업무상의 위상이 높아져야 한다.

식품위생 수준의 선진화

- ◆ 소비자인식은 높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아 못 따라 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식품위생수준이다. 여전히 중소규모 식당, 식육판매점, 가공식품생산업체 등의 부정불량식품 생산,

판매가 많고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직 경제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가격상승 요인이 되니 그냥 수준에 맞게 먹자 하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망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 ◆ 대표적으로 냉장유통시스템을 들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잘 지어진 건물에 위생적으로 보이는 대형유통판매점에서도 냉장온도 10℃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냉장온도 5℃ 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냉장냉동전용차량에 의해 식품을 수송하고 판매점의 매대관리 온도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에 따라 유통기한도 더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되기도 한다.
- ◆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기업도 수준이 높아진 것 같아도 여전히 안전관리시스템상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 걸리면 운이 좋은 것이고 걸리면 재수 없는 것 정도로 일시적 대응을 하고 넘어가려는 태도가 여전하다. 그리고는 과학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인데 소비자들이 호들갑이라고 한다. 쓸데없이 기준이 강하니 낮추어야 한다고 한다. 특히 식품위생 영역에 있어서는 타협 없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야 하며 그럴 자신이 있는 사람만 식품 기업이나 판매를 해야 한다. 아직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소송도 많이 안하고 착하고 순진해서 소리나 지르고 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식품위해사고에 대해 소비자배상소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를 위한 연구와 연구자의 육성

- ◆ 식품기업은 연구소도 있고 정보도 있고 돈도 있지만 소비자는 없다. 연구소이 연구자는 프로젝트 주는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 “을”의 위치이다. 대학교수들은 제자를 식품 기업에 취직시켜야 하고 기업이 주는 프로젝트 받아서 기능성 식품연구도 해야 하고 제품화도 해야 하니 기업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단체는 취직자리도 못 만들고 프로젝트도 못준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연구를 기업을 위한 연구보다 열배 백배 더 해야 한다.

- ◆ 영국의 광우병 사태는 광우병이라는 식품으로 인해 유해하는 질병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충격을 사회에 던져주었다. 광우병 발병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기 전까지 영국의 대다수 과학자, 연구자는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불안해하는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에게 과학적 사실을 몰라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소를 더 튼튼하고 육질이 좋게 키울 수 있는 길을 막는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맞았고 과학자들은 틀렸다. 전문가주의 또는 전문가의 오만이 광우병으로 무너진 것이다.
- ◆ 소비자들의 우려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며 왜 그 같은 걱정을 하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찾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은 화학식의 조합이 아니라 문화이며 인식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위한 연구는 비교정보를 비롯하여 식품표시정책, 식품관련 법제연구 등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적 관점을 투입하기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기업의 영향 없이 소비자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